정부, 온디바이스 AI활성화 전략 내놓는다

AI · 디지털 관련 범부처 정책 재설계… 디지털 전략 2.0 수립

K-AI · 디지털 기업 정책금융 5.1조 지원…AI 일상화에 7737억 투입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범부처 정책을 종합 재설계 한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AI·디지털 신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생활 필수 서비스에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 예산에 올해 7737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기업을 지원할 5조1000억원의 정책금융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범부처 AI·디지털 정책을 종합·재설계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수립한다. 이는 AI 공존시대를 맞아 저성장·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관이 함께 AI로 성장하는 대전환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에서의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올해 4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AI 플랫폼 확산과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또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위해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 속 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7737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마이닥터 24·디지털마음건강, 교육 분야는 나만의 교과서, 일상 생활에서는 최적 통신비 추천 및 AI 비서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K-AI·디지털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예산으로 총 5조1000억원을 책정,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15~30%로 상향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착에도 나선다.

다음달 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17개분야 52개 디지털 쟁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 한다.

AI·디지털 분야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해 오는 5월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연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캐나다, 영국 등과 우리나라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과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기존 3곳에서 5개로 늘리고 권역별 AI 지역융합사업(충청·강원·호남·영남)을 추진한다.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개편과 함께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팀 브리어클리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원예생산자협회와 발전 방안 모색

농식품유통공사,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중요성 공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팀 브리어클리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농업 선진국들의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세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 속 먹거리 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AIPH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하는 국제비정부기구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등 현지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김재훈기자

영세납세자 조사 자제… 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올해 세무조사 규모 1만4000건 이하로 운영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한다.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 1만4000건대를 기록했다.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1만3992건으로 1만3000건대에 돌입한 바 있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한다.

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중소납세자에서 모든 납세자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12월 예정이던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를 내년 12월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등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 집중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전담반(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체납·재산추적, 유관기관(검찰·경찰·금융감독원) 공조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 및 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도 진행한다.

사주의 별장·고가수입차 사유화, 근무 없이 고액급여 수령 등 호화·사치생활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도 엄단한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및 온라인 신종산업 관련 정보수집·분석 강화로 신종 탈루혐의 사전 포착할 계획이다.

경제의 급격한 디지털화·글로벌화에 대응해 적시성 있는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조직 보강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 고급 중고차 판매자료 등 과세자료를 연계·기획분석해 신종투자상품, 귀금속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발굴한다. /뉴시스

지역신산업 육성 자금 신설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 레드바이오 등 지역신산업 육성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도내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이 높은 지역 신산업 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신설됐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분기별로 나누어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1분기 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융자 지원 한도는 기업당 시설투자금 10억원(3년 거치, 5년 상환)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5%로 도에서 2.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 2.82%를 자부담한다.

신청대상은 이차전지, 레드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방위산업, 로봇,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경진원 홈페이지에서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금의 신청은 14일에서 20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만 가능하니 자금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지속적인 경기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자금 유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금융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올해 3300억원 신규보증추진 계획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이성진·사진)는 보증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올해 약 3,300억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정읍센터는 지난 20여년 이상 지역의 농어촌경제 기반 조성 및 균형 발전과, 청년 농림어업인 등 보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농림어업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에 적극 앞장서 왔다.

이성진 농신보 정읍센터센터장은 "올해에도 여전히 3고(금리, 물가, 환율)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령화 되어가는 농업인구 증가로 농어촌 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적극적인 농신보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기반이 유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김옥기 기자